

Global Market Report

2016/17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과 대응



목 차

요 약

| | |
|-----------|---|
| I. 예산안 개요 | 4 |
|-----------|---|

| | |
|---------------|----|
| II. 부문별 주요 내용 | 11 |
|---------------|----|

| | |
|----|----------------------------|
| 11 | 1. 경기 부양책 |
| 14 | 2. 재정 건전화 |
| 17 | 3.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 20 | 4. 조세제도 개혁 |
| 24 | 5. 제조업 육성 |
| 26 | 6. 인프라 개선 |

| | |
|--------------------|----|
| III. 우리기업 진출 기회 분석 | 28 |
|--------------------|----|

| | |
|----|-----------------------|
| 28 | 1. 이번 예산안에 대한 우리기업 반응 |
| 29 | 2. 이번 예산안에 따른 산업별 기상도 |
| 31 | 3. 시사점 |

요 약

인도는 2월29일 발표한 연방 예산안을 통해, 성장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예산규모 360조원 중 농촌개발에 15조원과 농가복지 부문에 6조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농촌과 농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인도에서 농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나 인구의 6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친기업·반농민 정권이라고 비난받아온 현 모디정권으로서는 성장의 속도를 잠시 늦추더라도 성장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성장에서 소외받아온 농민들을 위해 5년안에 농가 소득을 2배로 늘리고 농촌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전기없는 마을을 없애기로 발표한 것은 그간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소급 논란으로 큰 비난을 받아온 GAAR(포괄적 탈세 방지법안)의 도입은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였으며, 세제개혁의 핵심인 GST(상품서비스세)의 도입도 '계속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한편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22.5%나 증액된 39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특히 도로망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재정적자 수준을 GDP대비 전년 3.9%에서 3.5%규모로 줄이는 등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에서는 예산안 발표 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낙관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편이다. 또한 투자진출기업도 올해 예산안이 세제변화상의 큰 변화가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농가소득 확대 정책은 구매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구체적인 청사진이 발표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나 '전기없는 마을'을 위한 발전·송배전 프로젝트 확충은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I

예산안 개요

□ 인도정부,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아룬 자이틀리(Arun Jaitley) 인도 재무장관은 2월 29일(월) 인도 의회에서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서 인도는 2015-16 회계연도에 7.6%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Bright Spot'으로 발돋움했음을 자평
 -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에 대비하여, 1) 거시경제 및 재정안정성 제고, 2) 국내수요 증가를 통한 안정적 성장, 3) 경제개혁 및 사회정책 지속을 세 가지 전략으로 제시

<최근 인도의 경제 성장률>

| FY09 | FY10 | FY11 | FY12 | FY13 | FY14 | FY15 | FY16 |
|------|------|------|------|------|------|------|------|
| 8.6% | 9.3% | 6.3% | 4.5% | 4.7% | 7.1% | 7.3% | 7.6% |

[자료원 : 인도 통계부 Central Statistics Office]

* 주 : 인도 회계년은 4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으로, FY16년은 2015년 4월 부터 2016년 3월31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

<예산안을 발표하는 Arun Jaitley 재무장관>



[자료원 : The Times of India]

○ 거시적 안정성에 기반한 성장지향

- 2015-16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9%이나 2016-17 회계연도에는 이 비율을 3.5%까지 줄일 예정
- 공공부문 급여 및 군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임에 따라, 직접세 부과 면제대상을 축소하는 등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

<2015-16회계년 및 2016-17회계년 예산 총괄표>

[단위 : 천만 루피]

| 구 분 | 2015-16(A) | 2016-17(B) | 증감(B-A) |
|--------------|------------------|------------------|----------------|
| 경상수입 | 1,206,084 | 1,377,022 | 170,938 |
| 조세수입 | 947,508 | 1,054,101 | 106,593 |
| 비조세수입 | 258,576 | 322,921 | 64,345 |
| 자본수입 | 579,307 | 601,038 | 21,731 |
| 융자회수 | 18,905 | 10,634 | -8,271 |
| 기타수입 | 25,312 | 56,500 | 31,188 |
| 차입/기타부채* | 535,090 | 533,904 | -1,186 |
| 총수입 | 1,785,391 | 1,978,060 | 192,669 |
| 비계획지출 | 1,308,194 | 1,428,050 | 119,856 |
| 계획지출 | 477,197 | 550,010 | 72,813 |
| 총지출 | 1,785,391 | 1,978,060 | 192,669 |
| 재정적자* | 535,090 | 533,904 | -1,186 |

[자료원 : 인도 재무부]

* 주 : 재정적자(차입금)=총지출-(세금+융자회수+기타수입)

- 전체 예산규모는 19조7806억루피(약 357조원)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함

○ 농촌개발 및 농민복지에 초점

- 이번 예산안에는 농촌개발에 무려 15조840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농민 복지에도 6조4900억원을 배정하는 등 '농민과 농촌'에 초점을 맞춤
- 5년내 농가 소득을 2배로 늘리고, 전기없는 마을을 없애겠다고 발표

□ 'Transform India' 소외부문 개선 및 경제개혁 지속

- 이번 예산안은 'Transform India'라는 구호 아래, 농촌, 사회복지, 교육, 인프라 및 투자, 금융 등 주요 9개 분야에서 인도의 전환을 유도

<Transform India 9개 분야>

- 1) 농가 소득증대, 2) 농촌 고용 및 인프라 확충, 3) 사회복지,
- 4) 교육인프라 확충, 5) 인프라 확충 및 투자증대, 6) 금융개혁,
- 7) 기업환경개선, 8) 건전한 재정운용, 9) 세계개혁

- 특히, 그동안의 경제성장에서 농촌부문이 소외되었음을 강조하며, 농촌·농민 관련 지출예산을 대폭 증액
 - 농업에 대한 예산을 전년도 대비 56%가까이 늘려 농업 생산성 증진과 농민복지 향상에 집중
- 이외 인프라, 투자유치, 기업환경 개선 지속 강조
 - 부문별 지출에서는 에너지, 교통 부문이 각각 전체 지출의 29.2%,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부문도 14.2%를 차지, 작년 연방예산 지출 계획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개선과 사회복지에 집중

□ '친기업·반농민 정권'이라는 이미지 변신을 통해 개혁추진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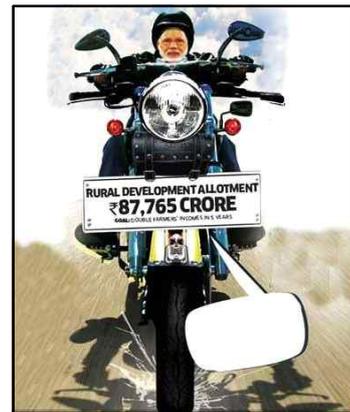
- 소외계층에게 적극 구애하여 경제개혁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히고 주선거 승리와 상원 과반을 확보하여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
 -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은 그간 친기업·반농민 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최근 델리주, 비하르주 등 전략지역에서 패배한 바 있음
 - 세계개혁, 노동법개혁 등 굵직한 개혁과제가 상원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상원의석 추가확보를 위해서는 농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주정부 선거에서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
 - 2016년에는 5개주(폰디체리, 아쌈 등)에서 주선거가 치러지며, 상원위석이 80석이나 걸려있는 우타르프라데쉬 주 선거도 2017년 5월 치러질 예정이어서 모디 정부로서는 이들 선거에서 선전해야만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 할 수 있음

<2016년 및 2017년 주선거 실시 지역>

| 주 명 | 예정시기 | 주의원 규모 | 상원의원 규모 |
|-------------------------------------|-----------------|------------|-----------|
| 아쌌 (Assam) | 2016년 5월 | 126 | 14 |
| 타밀나두 (Tamil Nadu) | 2016년 5월 | 234 | 39 |
| 웨스트 벵갈 (West Bengal) | 2016년 5월 | 294 | 42 |
| 케랄라 (Kerala) | 2016년 5월 | 140 | 20 |
| 고아 (Goa) | 2017년 5월 | 40 | 2 |
| 펀잡 (Punjab) | 2017년 5월 | 117 | 13 |
| 폰디체리 (Pondicherry) | 2016년 6월 | 30 | 1 |
| 우타르 프라데쉬 (Uttar Pradesh) | 2017년 5월 | 403 | 80 |
| 우타라칸드 (Uttarakhand) | 2017년 8월 | 70 | 5 |
| 마니뿌르 (Manupur) | 2017년 11월 | 60 | 2 |

[자료원 : elections.in]

<이번 예산안에 대한 언론 만평>



[자료원 : Economic Times]

- 인도에서 농업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60%가 아직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
- 최근 2년에 걸친 흉년으로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악화된 상황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 부문별 주요골자>

① 농업 발전과 농민복지 향상

- 농촌개발에 총 8,777억루피(약 15조8400억원) 투입
- 농민 복지 향상을 위해 3,598억루피(약 6조4900억원) 투입
- 기존 농업정책의 방향을 'Food Security'에서 'Income Security'로 전환하고 2022년 까지 농가소득을 2배로 늘리기 위한 지원책 실시
- (생산성 향상) 물관리 및 관개시설 확충을 통해 285만 헥타르의 농지 생산성 개선하고 2000억루피(약 3조6010억원)규모의 관개시설개선 펀드 조성
- (질적 향상) 유기농 작물 재배와 수출장려를 위한 예산 41.2억(약 744억원)루피 책정
- (유통망 개선) e-Market플랫폼 구축으로 585개 도매상과 공급 시스템 온라인화
- (인프라 확충) 농촌 도로확충 사업에 2,700억루피(약 4조8735억원) 지원하고 2018년 6월까지 전 농촌지역에 전력공급하며 970만톤 규모의 곡물창고 확충
- (금융지원) 농업관련 대출규모를 전년 8.5조루피에서 9조루피(약 162조원)까지로 확대하고 농작물 관련 보험을 신규보급(550억루피, 약 9,927억원)
- (기초지자체 지원) 농촌지역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규모 228% 확대
- (기타) 위생환경 개선 우수도시 포상, 농촌지역 IT인프라 지원

② 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 일자리 창출

- 교육,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1조5,158억 루피(약 27조 3602억원)를 배정, 인도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의료) 빈곤계층 가정당 10만 루피(약 180만원)를 지원하고 필수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창업) 불가촉천민(SC/ST)의 창업 장려를 위해 50억 루피 배정(약 902억원)
- (교육) 초등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에 62개 학교 추가건립하고 공립, 사립 교육기관 각 10개교를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육성. 고등교육 개선을 위해 100억루피(약 1,805억원) 규모 펀드 조성. 각종 기술획득관련 자격체계 확충
- (고용창출) 유통부문 소규모 기업의 주 7일 영업 허용, 농촌지역 고용보장 프로그램(MNREGA)에 3,850억루피(약 6조 9492억원) 배정

③ 인프라 확충

- 도로 및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2조2124억 루피(약 39조9천억원) 투입
- (도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9700억 루피(약 17조 5천억원)투입하며 고속도로(NH)를 10,000km 연장하고 여객 수송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 (항만) 주요 항구 현대화에 80억 루피(약 1,444억원) 책정
- (공항) 지방 영세 공항 대상, 각 공항 당 5~10억 루피(약 90억원~180억원) 지원
- (전력, 에너지) 가스전 신규개발시 인센티브 부여하고 원자력 발전에 300억 루피(약 5,415억원) 투입
- (PPP 활성화) 민관합동개발(PPP) 분쟁조정 관련 법안 상정 등 활성화 노력

④ 투자유치 및 기업환경 개선

- (지분보유 상한 확대) 주식거래소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15%)
- (거버넌스 강화) 정부기관 민원처리 프로세스 합리화, 정부 인력자원 효율화
- (정부조달) 주정부과 중앙정부 기관별로 나뉘어있는 조달 시스템의 통합 및 개선
- (회사법 개정) 법인등록 절차 간소화 등 창업환경 개선
- (파산법 제정) 기업 해산 및 파산절차 간소화
- (외국인 투자상한 완화) 보험/연금(49%), 식품가공(100%), 자산재건(100%)
- 일부 산업분야 외국인 투자 상한제한 완화, 기업청산 절차 개선

⑤ 금융부문 안정화

- 금융시장의 체계개선과 자본확충으로 경제안정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
- (금융체계 개선) 투명한 통화정책을 위한 중앙은행법 개정 및 관련 위원회 신설. 금융부문 정보수집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구설치
- (회사채 시장 활성화) 인도보험공사(LIC) 기금일부를 인프라 관련 사업에 투자.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체계 및 전자 플랫폼 구축
- (악성자산 해소) 자산재건회사 외국인 투자상한 100%로 확대.
- (은행 체질강화) 정부소유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2,500억 루피(약 4조 5125억원) 배정. 국영 IDBI 은행을 비롯한 공공부문 은행간 합병 지속추진
- (금융접근성 강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ATM기의 전국적 보급 확대
- (공공부문 기업 정보공개) 정부소유 기업의 투명성 및 경영 건전화화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추진

6 Make in India 지원과 조세개편

- 제조업 지원과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세금감면
- (직접세) 근로소득 관련 세금감면 확대, 창업기업 최초 3년 수익에 대한 세금 공제, 미신고 소득에 대한 추가 징수확대, 법인세율은 변동없음
- (관세, 물품세) 대부분의 경우 변동 없음. 일부 전자제품, 소비재, 섬유, 제지, 건설원자재 및 부품류에 대한 관세 및 물품세 조정. 세수확보를 위해 담배세 대폭 상향조정(10~15% 인상)
- (서비스세) 기존 14.5%에서 15%로 0.5%p 인상. 상품수송용 선박 운임에 서비스세 부과
- (인프라세) 인프라 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자동차 산업에 인프라세 부과
- (GST도입) 인도 정부는 복잡한 간접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간접세를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회계년(2017-18년)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회사법 개정
- (GAAR 도입 연기) 소급적용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GAAR(포괄적 탈세 방지법안)은 이번 회계년에도 도입을 연기함

7 기타 일반

- (재정건전화)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 GDP대비 3.9%에서 3.5%로 축소
- (지출구분) 총 지출규모는 19.78조 루피(약 357조원)이며, 이중 계획 지출은 5.5조 루피(약 99조원), 비계획 지출은 14.28조 루피(약 258조원)임. 차년도 예산안부터는 계획과 비계획 지출의 구분을 없앨 예정.
- (중앙/지방) 주정부의 지출권한을 늘리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총 세입 중 중앙정부의 비중을 68%에서 향후 58%로 축소

II

부문별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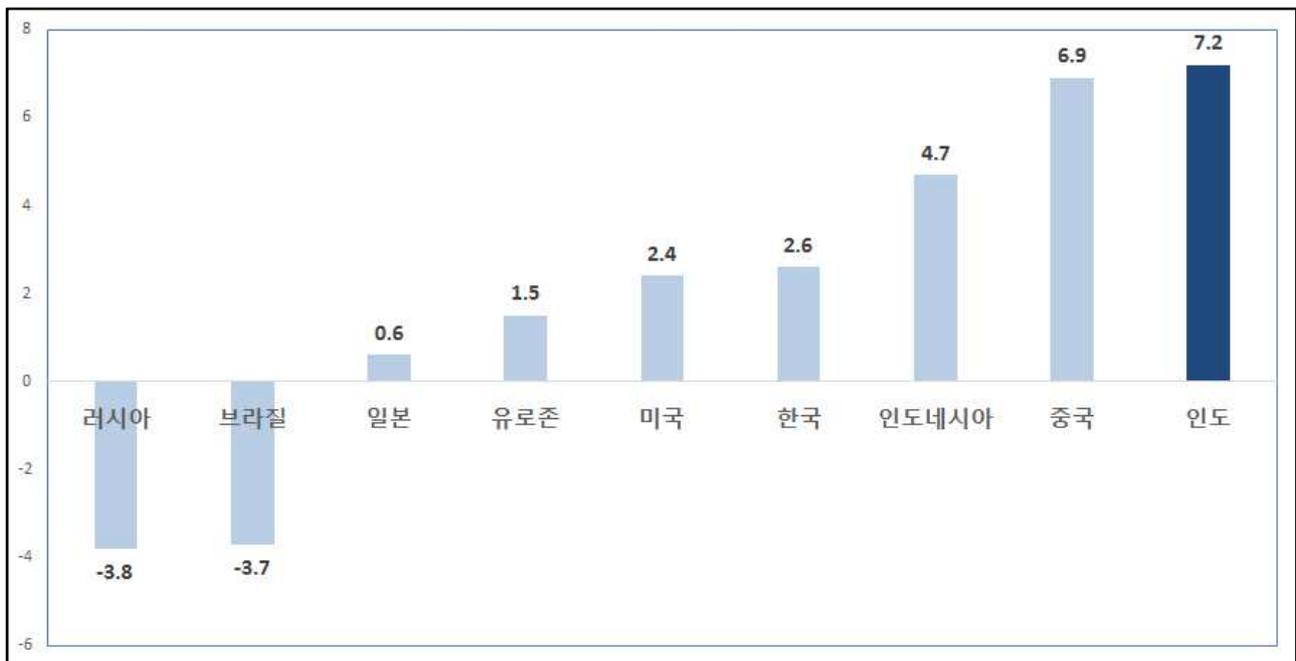
1

경기부양책

□ 안정적 성장세 지속을 위한 노력

- 2015-16 회계연도에 7.6%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인도는 당분간 고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
- 노무라는 2016-17년 인도가 7.8%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

<2015년 주요국 성장률 비교>



[자료원 : EIU]

* 주 : 2015년 인도 성장률은 7.2%이며, 인도 회계년(4월부터 익년 3월) 기준으로는 7.6%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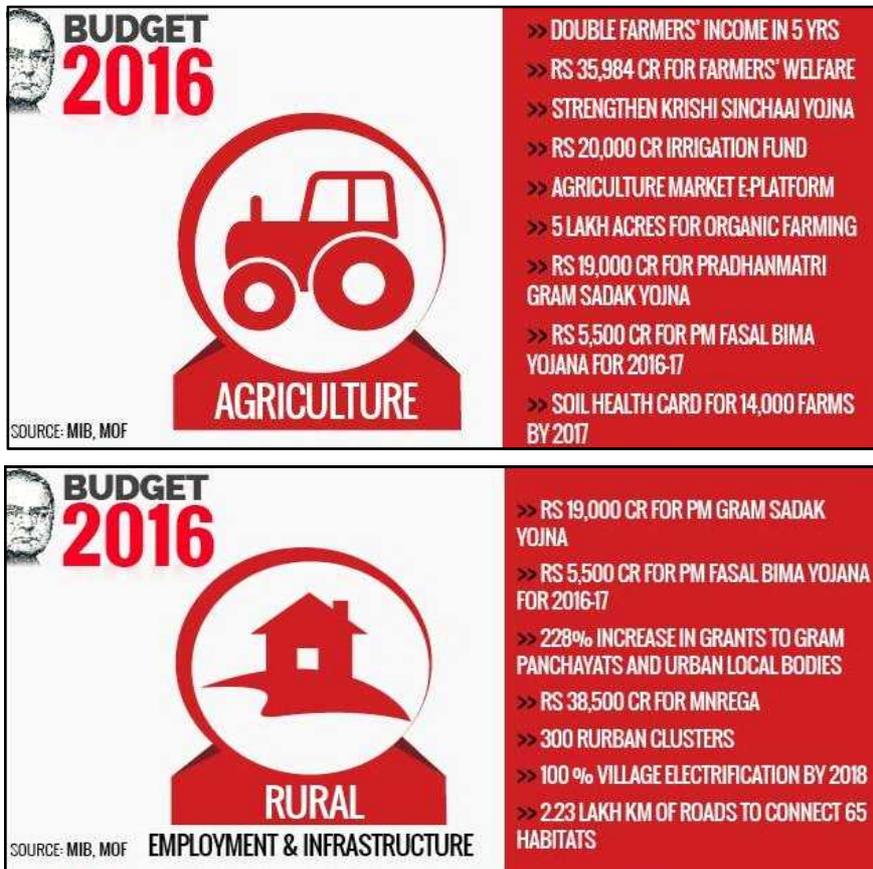
○ 전년 대비 늘어난 정부지출

- 인도 정부는 이번 2016-17회계년에 19조7806억 루피(약 357조원)를 책정하여 전년 대비 10.8% 증액하면서도, 재정적자 수준을 전년 GDP대비 3.9%에서 올해 3.5%로 줄이는 균형예산을 편성해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 농촌 소득증대와 인프라 확충이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

- 농촌개발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경기부양
 - 농가 소득을 5년내 2배로 늘리고, 농촌 개발과 농민의 삶을 끌어올리는데 상당 규모의 예산을 배정
 - * 농촌개발에 총 8,777억루피(약 15조8400억원), 농민복지향상에 총 3,598억루피(약 6조4900억원)투입
 - 매년 강수량에 따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관개시설 정비에 2,000억루피(약 3조6100억원)를 투자하고,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

<예산안 중 농업·농촌 관련 사항>



[자료원 : 인도 재무부 및 정보통신부, The Times of India에서 재인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2조2124억 루피(약 39조9천억원) 투입
 - 도로, 철도,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전년보다 인프라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을 22.5%나 늘림

□ '농민 고용보장' 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농촌지역 거주민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농촌 고용보장사업(MNREGA)에 3,850억루피(약 6조9492억원)를 배정하여 농가수입 보장

<농촌고용보장사업(MNR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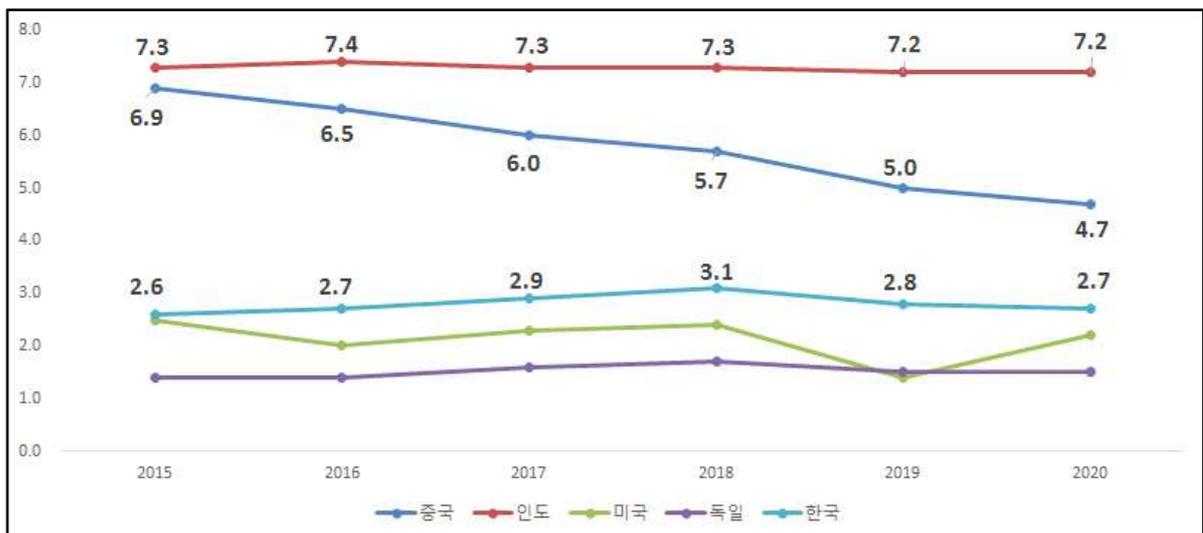
농촌고용보장사업은 농촌고용보장법(MNREGA,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이며 농민들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임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1년에 최소 100일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는 농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임

□ 중장기적 성장세 구가를 위한 안정성 유지에 중점

- EIU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임
- 하지만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최근 종교 및 카스트 관련 분쟁이 계속되자, 모디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추구하게 됨

<2015~2020년 주요국 성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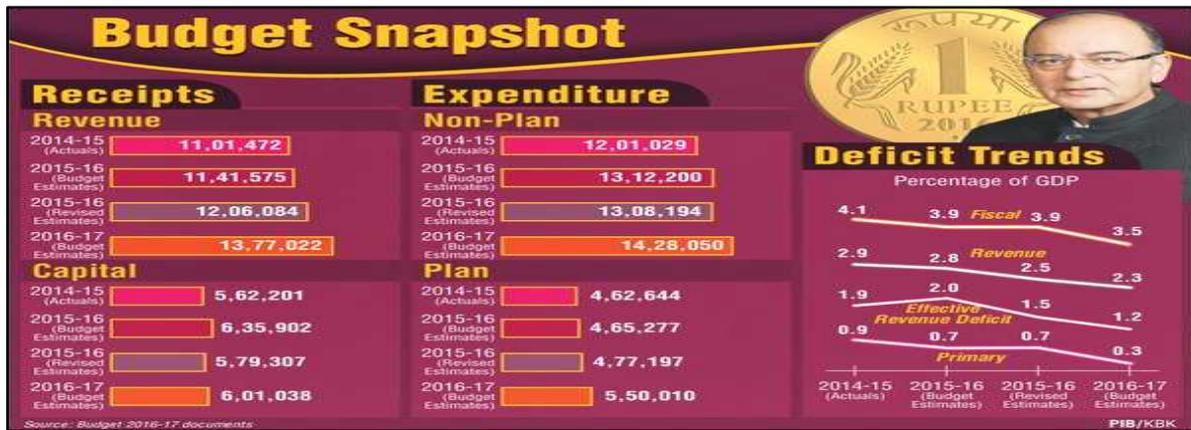
[자료원 : EIU]

2 재정건전화

□ 인도의 고질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움직임

- 인도는 해마다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중장기적 안정성이 의심 받아 왔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5% 수준으로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음
 - 2015-16년 예산안 발표 때 재정적자 수준을 3.5%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연기하고 3.9%대의 확장재정을 편성한 바 있어, 올해에도 확장재정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았으나, 인도 정부는 결국 안정적 재정운동을 선택
 - 이에 따라 재정적자 수준은 2014-15년 GDP대비 4.1%에서 2015-16년과 2016-2017년 3.9%를 거쳐 올해 3.5%대로 개선됨
 - 인도 정부는 내년(2017-18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3%로 설정함
- * 인도의 누적 재정적자는 GDP의 64.9%(2014년 기준) 수준임

<인도 정부의 세입세출규모와 재정적자 수준 추이>



[자료원 : 인도 예산안, DNA에서 재인용]

□ 세수 확대와 재정투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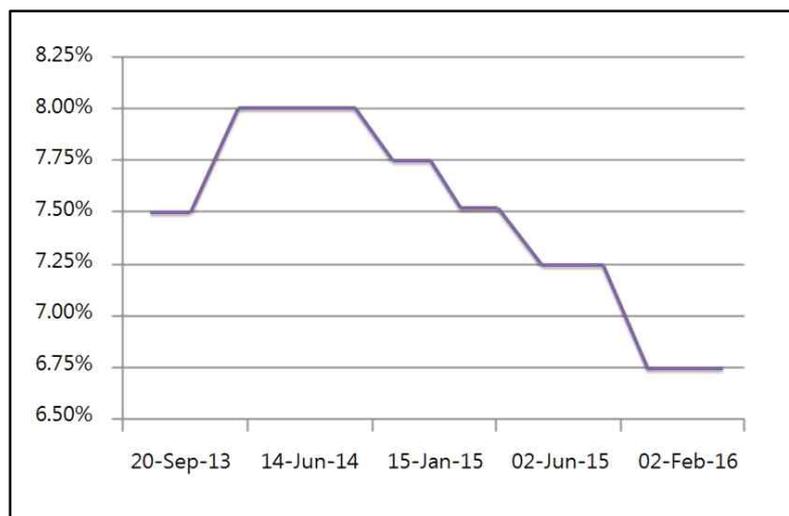
-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예상치를 전년 대비 11.2% 늘어난 10.54조 루피 (약 190조원)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과세범위를 넓힘
 - 면세품목과 범위를 상당부분 줄이고, 탈루세액의 추징을 강화

- 제7차 공무원임금위원회(Pay Commission)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수령액이 23.5% 인상되고,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가 변경되면서 750억루피(약 1조3538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정수요가 늘어난 점도 인도 정부에게는 부담
 - * 공무원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올 1월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른 부담액은 약 1조루피(약 18조원)임
 - * 군인연금제도는 OROP(One Rank One Pension)제도로 개편되며, 이는 군인연금의 지급을 제대시기가 아닌 계급에 맞추는 것이 골자임
- 또한 내년 부터는 예산안 발표시 계획지출과 비계획지출의 구분을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필요시 계획여부와 무관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 금리인하 가능성 커짐에 따라 기업 및 투자자들은 환영

- 인도 정부가 안정적 재정을 편성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리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
 - 인도 기준금리(Repo)는 현재 6.75%이며 2014년 이후 꾸준히 인하되고 있음

<인도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원 : RBI]

- 1월 도매물가가 -0.9% 인상으로 마이너스 상태이고, 소매물가도 5.7%로 안정된 수준이어서 4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

<인도 소매 및 도매물가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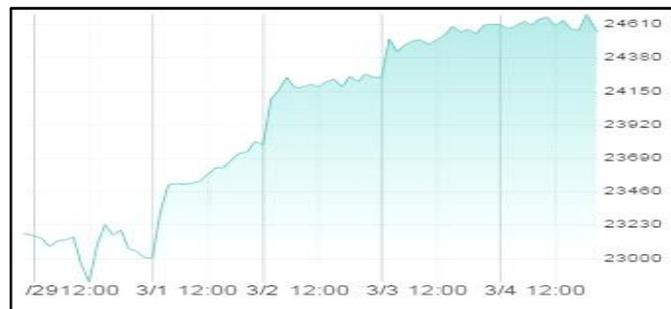
| 연 도 | 소매물가 | 도매물가 |
|--------------------|-------|-------|
| FY10 (10년4월~11년3월) | 10.4% | 9.6% |
| FY11 (11년4월~12년3월) | 8.3% | 8.9% |
| FY12 (12년4월~13년3월) | 10.3% | 7.4% |
| FY13 (13년4월~14년3월) | 9.8% | 6.0% |
| FY14 (14년4월~15년3월) | 4.6% | 2.0% |
| 2015년 2월 | 6.3% | -2.2% |
| 2015년 3월 | 6.3% | -2.1% |
| 2015년 4월 | 5.8% | -2.1% |
| 2015년 5월 | 5.7% | -2.0% |
| 2015년 6월 | 6.1% | -2.2% |
| 2015년 7월 | 4.4% | -3.8% |
| 2015년 8월 | 4.3% | -4.9% |
| 2015년 9월 | 5.1% | -4.5% |
| 2015년 10월 | 6.3% | -3.8% |
| 2015년 11월 | 6.7% | -2.0% |
| 2015년 12월 | 6.3% | -0.7% |
| 2016년 1월 | 5.7% | -0.9% |

[자료원 : 인도 통계부(Central Statistics Office), 포스코경영연구소 친디아플러스에서 재인용]

□ 예산안 발표 후 인도 증시는 큰 폭 상승

- 인도 정부의 예산안 발표후 인도 증시는 예산안에 따른 낙관론 확산 및 재정건전화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예산안 발표 다음날인 3월1일 인도 센섹스(SENSEX) 지수는 777.35포인트 (3.38%)상승하여 지난 2013년 9월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함
- 2월29일(월) 예산안 발표후 4일간 연속 주가가 상승하며, 최근 10년내 예산안 발표 주간중 가장 상승폭이 높은 주를 기록함

<예산안 발표후 인도 주가추이>



[자료원 : The Economic Times]

3 |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인도정부,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지속강조

- 모디 정부는 부정부패 및 관료주의 척결, 투자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사업용이성 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인도는 2015년 189개 국 중 142위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130위로 소폭 개선됨
- * 모디 총리는 동 순위에서 인도를 50위 이내로 진입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한 바 있음

<2015, 2016년 인도의 사업용이성(Doing Business)순위 변동 추이>

| 항 목 | | 2015 | | 2016 | |
|--------|---|-------|-----|-------|-----|
| | | 수치 | 순위 | 수치 | 순위 |
| 창 업 | Procedures (number) | 11.9 | 158 | 12.9 | 155 |
| | Time (days) | 28.4 | | 29 | |
| | Cost (% income per capita) | 12.2 | | 13.5 | |
| | Paid-in min. capital (% of income per capita) | 111.2 | | 0.0 | |
| 건축인허가 | Procedures (number) | 25.4 | 184 | 33.6 | 183 |
| | Time (days) | 185.9 | | 191.5 | |
| | Cost (% of warehouse value) | 28.2 | | 26.0 | |
| 전기공급 | Procedures (number) | 7 | 137 | 5 | 70 |
| | Time (days) | 105.7 | | 90.1 | |
| | Cost (% income per capita) | 487.7 | | 442.3 | |
| 부동산 등록 | Procedures (number) | 7 | 121 | 7 | 138 |
| | Time (days) | 47 | | 47 | |
| | Cost (% property value) | 7.0 | | 7.5 | |
| 자금조달 |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0-12) | 6 | 36 | 6 | 42 |
| | 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0-8) | 7 | | 7 | |
| | Credit registry coverage (% of adults) | 0.0 | | 0.0 | |
| | Credit bureau coverage (% of adults) | 22.4 | | 22.0 | |
| 무 역 | N/A | N/A | 126 | N/A | 133 |
| 계약이행 | Time (days) | 1,420 | 186 | 1,420 | 178 |
| | Cost (% of claim) | 39.6 | | 39.6 | |

[자료원 : World Bank Group]

<인도, 중국, 한국의 사업용이성(Doing Business) 순위 비교>

| 구 분 | 인 도 | 중 국 | 한 국 |
|--------------|------------|-----------|----------|
| 창 업 | 155 | 136 | 23 |
| 건축인허가 | 183 | 176 | 28 |
| 전기공급 | 70 | 92 | 1 |
| 부동산 등록 | 138 | 43 | 40 |
| 자금조달 | 42 | 79 | 42 |
| 소액투자자 보호 | 8 | 134 | 8 |
| 세금납부 | 157 | 132 | 29 |
| 무 역 | 133 | 7 | 2 |
| 계약이행 | 178 | 96 | 31 |
| 종합 순위 | 130 | 84 | 4 |

[자료원 :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6]

□ 인도정부,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지속강조

- 인도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재강조
- 외국인투자시 자동승인 범위를 넓히고, 분야별 투자 지분제한을 완화

<모디 정권의 외국인 투자지분 완화 사례>

| 분 야 | 투자한도 | 승인방식 |
|------------|---------|--|
| 통 신 | 100% | ~49% : 자동승인 49~100% : FIPB 승인필요(2013) |
| 단일 브랜드 소매업 | 100% | ~49% : 자동승인 49~100% : FIPB 승인필요(2013) |
| 식품 마케팅 | 100% | FIPB 승인필요(2016) |
| 국방 | 26%→49% | 2014 |
| 자산재건회사 | 100% | ~49% : 자동승인 49~100% : FIPB 승인필요(2013) |
| 철도 | 100% | 2014 |
| 신용정보회사 | 49%→74% | ~74% : 자동승인(2013) |
| 운송서비스 | 100% | ~100% : 자동승인(2014) |
| 전력거래 | 49% | ~49% : 자동승인(2014) |
| 석유정제, 천연가스 | 49% | ~49% : 자동승인(2013) |
| 차 플랜테이션 | 100% | ~100% : FIPB 승인필요(2014) |
| 상품거래 | 49% | ~49% : 자동승인(2014) |
| 보안업체 인프라회사 | 49% | ~49% : 자동승인(2014) |

[자료원 : 인도 상공부, KOTRA 재구성]

* 주 :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 외국투자유치위원회

-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및 체계정비
 - 인프라 관련 투자촉진을 위해, 민관합동개발(PPP) 프로젝트 추진시 발생하는 분쟁조정에 관한 법안을 상정
 - 파산법(Insolvency & Bankruptcy Bill)을 제정하여, 기존 4개 법안에 걸쳐 규정되어있던 기업의 청산절차를 간소화
 -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법인 등기가 하루 만에 가능하도록 개선 중
- 투자제한 완화 및 기타 개선노력
 - 외국투자유치위원회(FIPB)의 투자승인검토시 원스톱승인(Single Window Clearance)을 할 수 있는 투자규모를 기존 300억 루피(약 5,412억원)에서 500억 루피(약 9,025억원)로 확대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기존 5년 제한 상용비자를 발급하던 것에서 거주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15년 4월~12월 기간중, 對인도 FDI유입액(385억 달러) 전년대비 40% 증가

<연도별 對인도 FDI 유입액>

[단위 : 억 달러, %]

| FY10 | | FY11 | | FY12 | | FY13 | | FY14 | |
|------|-------|------|-------|------|--------|------|-------|------|-------|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 350 | -7.7% | 470 | 33.6% | 360 | -23.7% | 350 | -0.8% | 440 | 25.6% |

[자료원 : 인도 통계부(CSO), 인도 중앙은행(RBI), 포스코경영연구소 친디아플러스에서 재인용]

<2015년 4월 이후, 월별 對인도 FDI 유입액>

[단위 : 억 달러, %]

| 2015년 4월 | | 2015년 5월 | | 2015년 6월 | | 2015년 7월 | | 2015년 8월 | |
|----------|-------|-----------|--------|-----------|-------|-----------|--------|------------------------|-------|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 46 | 77.7% | 48 | -12.1% | 29 | 0.0% | 30 | -32.3% | 30 | 29.5% |
| 2015년 9월 | | 2015년 10월 | | 2015년 11월 | | 2015년 12월 | | 4월~12월 총 385억 달러 유입 | |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유입액 | 증가율 | | |
| 40 | 7.9% | 62 | 64.8% | 40 | 47.8% | 60 | 83.0% | | |

[자료원 : 인도 통계부(CSO), 인도 중앙은행(RBI), 포스코경영연구소 친디아플러스에서 재인용]

4 조세제도 개혁

□ 미세조정을 통한 완만한 조세개혁 추진

- 이번 예산안에서는 대부분 세목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일부 미세조정을 시행함
 - 하지만 통합 간접세법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소급적용 논란으로 많은 우려를 자아낸 포괄적 탈세 방지법안(GAAR)은 도입을 연기함으로써 그간의 개혁 기초를 유지
 - *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와 포괄적 탈세 방지법안(GAAR, General Anti Avoidance Rule)은 2017-18년 도입 예정
- (직접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변동없음. 개인 근로소득 감면확대
- (간접세) 관세, 물품세 기본세율 변동없음. 서비스세 0.5%p 인상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프라세 신설 부과
 - Make In India 정책 추진 관련, 제조업 관련 일부 부품·원자재에 대한 물품세(excise duty)를 인하함
 - Startup India 정책 추진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규제완화, 창업기업의 법인세 최초 3년간 전액 공제, 기금조성을 통한 창업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책을 발표함

□ 직접세(Direct Tax)

- (법인세) 현 세율(30%) 변동없으며 모디 정부는 향후 5년내 법인세를 25%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신규 제조기업인 경우 법인세를 25%로 인하(※ 기타 공제가 없는 조건)
 - 연매출 5000만루피(약 9억원)이하인 경우 법인세를 29%로 인하
 - '16년 4월 ~ '19년 3월 사이 설립된 창업 기업에 한해 최초 3년간 법인세 전액 공제
- (개인소득세) 현 세율(최대 30%) 변동 없으며, 연 소득 1000만루피(약 1.8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에 부과되는 추가세금(Surcharge)을 12%에서 15%로 인상
 - 즉, 소득이 1,000만루피 이상인 경우, 소득세율은 30%보다 높은 34.5%가 됨

□ 간접세(Indirect Tax)

① 관세(Customs Duty)

- 기본 관세율(10%) 및 실효관세율(29.44%)은 변동없음
 - * 실효 관세율은 기본 관세율에 상계관세와 특별상계관세, 교육세를 합하여 계산됨
- 수출입 기업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여 관세 후불 결제가 가능해짐
 - * 수출입 결제에 대한 신용도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한함
-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일부 부품·원자재의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내수시장 보호와 세수확보를 위해 일부 품목은 관세를 인상함

<관세율 인하 품목>

| 품 목 명 | 기본 관세율 변화(%) | |
|--|--------------|----------|
| | 2015-16년 | 2016-17년 |
| Denatured ethyl alcohol(ethanol), Silica Sand | 5 | 2.5 |
| Lignite, Peat | 10 | 2.5 |
| Coke and semi-coke of coal, Coal gas, Water gas | 10 | 5 |
| Aluminium oxide for use in manufacture of wash coat | 7.5 | 5 |
| Super absorbent polymer | 7.5 | 5 |
| Wood in chips or particles for manufacture of paper | 5 | 0 |
| Pulp of wood or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 5 | 2.5 |
| Specified fibres, Filaments/Yarns | 5 | 2.5 |
| Parts and components for dvr and lithium ion battery | 7.5/10 | 0 |
| Parts and raw material for manufacture of E readers | 10 | 5 |
| Refrigerated containers | 10 | 5 |

[자료원 : 인도 예산안, EY 예산안 안내자료에서 재인용]

<관세율 인상 품목>

| 품 목 명 | 기본 관세율 변화(%) | |
|--|--------------|----------|
| | 2015-16년 | 2016-17년 |
| Printed plans, Perform of silica | 0 | 10 |
| Solar tempered glass | 0 | 5 |
| Imitation jewellery | 10 | 15 |
| Primary aluminum products | 5 | 7.5 |
| Other aluminum products, Industrial solar water heater | 7.5 | 10 |
| Zinc alloys(7901 20) | 5 | 7.5 |
| E readers | 0 | 7.5 |
| Golf cars | 10 | 60 |
| Natural latex rubber | 10 | 20 |

[자료원 : 인도 예산안, EY 예산안 안내자료에서 재인용]

② 물품세(Excise Duty)

- 물품세율은 12.5%로 전년과 동일함
 - 물품세는 물건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향후 간접세 체계가 통합되면 서비스세 등 다른 세목과 함께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될 예정임
 - 농업 및 제조업 지원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물품세를 인하하였으며, 국민건강과 세수확보를 위해 담배에 대한 물품세를 인상함

<물품세 인하 품목>

| 품 목 명 | 물품세 변화(%) | |
|---|-----------|----------|
| | 2015-16년 | 2016-17년 |
| Electric motor for centrifugal pump | 12.5 | 6 |
| Refrigerated containers, Micronutrients | 12.5 | 6 |
| Concrete Mix, Solar lamp, Improved cookstoves | 12.5 | 0 |
| Parts for charger/adapter and battery | 12.5/0 | 0 |
| Routers, Set-top boxes, CCTV camera, Lithium ion battery | 12.5 | 일부제품만 4% |
| Parts for routers, broadband modems, set-top boxes, DVR, CCTV camera, lithium ion battery | 12.5 | 0 |
| Engine for HV(atkinson cycle), Engine for xEV(hybrid electric vehicle) | 12.5 | 6 |
| Parts of railway or tramway locomotives | 12.5 | 6 |
| Carbon pultrusions | 12.5 | 6 |

[자료원 : 인도 예산안]

- 한편 담배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10~15% 인상 하였으며 이는 7~8% 정도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
 - 인도는 강력한 담배소비 억제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4-15년과 2015-16년에도 담배에 대한 물품세를 각각 21%, 13% 인상한 바 있음
 - 일반적인 담배제품의 물품세는 예산안 발표전 55%수준에서 65%로 인상
 - * 씹는 담배(70%→ 81%)와 가공하기전 담배(55%→ 64%)도 물품세 인상됨

③ 서비스세(Service Tax)

- 기존 서비스세율(14.5%)에서 0.5%p인상되어 15%로 세율 변경
 - 서비스세(14%)에 Clean India세(Swachh Bharat Cess) 0.5%를 합산하여 14.5% 부과되던 것에서, 신설된 농업진흥세(Krishi Kalyan Cess) 0.5%가 추가 합산되어 2016년 6월1일부터는 15% 세율이 적용됨
 - 또한 선박을 이용한 상품수입시 관련된 운송임에 대해 2016년 6월 1일부로 서비스세 14%(기존0%)가 부과됨
 - 자폐증, 뇌성마비 등 일부 중증 환자를 위한 'Niramaya' 건강보험제도 등 일부 공공서비스(social service)에 대한 서비스세 면제

④ 인프라세(Infrastructure Cess)

- 인도정부는 도로건설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해 인프라세를 신설하고 차량 판매시 1~4%를 징수기로 결정함
 - 이번 예산안에서 판매가 100만 루피(약 1800만원)를 초과하는 자동차 구매 시 구매금액의 1%를 원천징수하도록 한 데 이어 인프라세까지 납부하게 되어 판매부진을 우려한 자동차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음
 - * 인도내에서 소형 차량을 주로 판매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상대적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자동차 판매에 따른 인프라세(Infrastructure Cess) 부과>

| 구 분 | 세율(%) |
|------------------------------------|-------|
| 전장 4m이하이고 배기량 1200cc 이하인 차량 판매시 | 1% |
| 전장 4m이하이고 배기량 1500cc 이하인 디젤 차량 판매시 | 2.5% |
| 기타 차량 판매시 | 4% |

[자료원 : 인도 예산안]

⑤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

- 인도 정부는 인도 국민연금(EPF) 납부액 일부 과세, 배당소득세 인상, 청량음료에 대한 물품세 인상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나섬
 - 탈루세금에 대한 페널티 강화와 각종 면세혜택 폐지도 동시에 추진 중

5 제조업육성

<이번 예산안과 제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인도 현지 반응>

- 인도 유력 중장비기업 JCB그룹의 비핀 손디(Vipin Sondhi)회장은 이번 2016-17년도 예산안이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 정책(Make in India)의 비전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함
- 특히, 농촌개발과 농촌복지 향상에 각각 8,777억루피(약 15조8400억원)와 3,598억루피(약 6조4900억원)를 투입한 것은 농촌 현대화로 이어져 농기계 산업 및 농촌인프라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 언급
- 또한 올해 인프라 개선을 위해 2조2124억루피(약 39조9000억원)를 배정한 것은 제조업 비중을 현 15%에서 2025년 25%로 늘린다는 Make In India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
- 수입 완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부품 및 원자재 수입에 대한 인하조치를 통해 'Make in India'를 촉진한다는 기조에는 작년과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자동차 판매에 대해 인프라세를 신설해서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

□ 인력 양성, 세제 혜택,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제조업 육성

- 모디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인력 양성제도, 세제 혜택,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지속하여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임
-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용비자 대신 '거주자 신분(Residency Status)'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함
 - * 현재 인도거주 투자자들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상용비자(Business Visa)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신규 제조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30%→25%), 전문 인력 육성 및 1500개의 기술학교 신설 등의 조치는 제조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근로자에 대해 인도국민연금(EPS) 고용주 납부분을 정부가 대신 납부기로 한 것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임

<이번 예산안 중 제조업 육성을 위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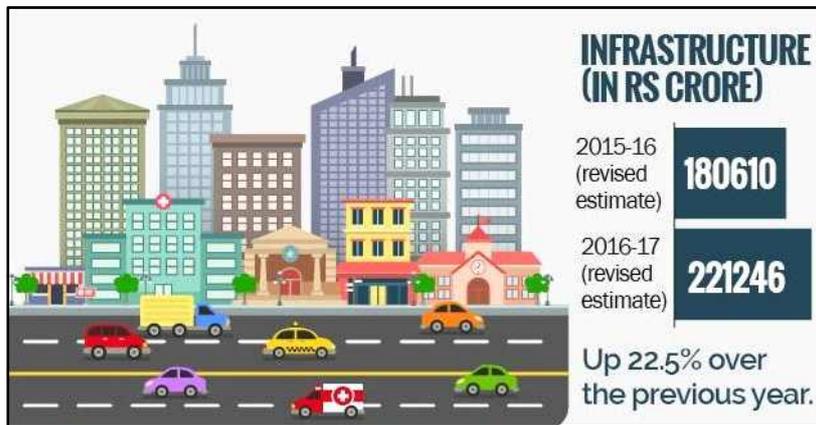
| | |
|--|---|
| 전문 인력 양성 | ① 인력 양성 프로젝트 추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dhan Mantra Kaushal Vikas Yojana(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약 1000만 명의 전문 인력 육성 - 인도 전역에 1,500개의 기술학교(Multi Skill Training Institutes)를 설립하고 170억루피(약 3068억원)를 배정 |
| 제조업 인센티브 | ② National Skill Development Mission 도입 |
| | ○ 국가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760만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
| | ① 신규 제조 기업 세금 혜택 및 절차 간소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3월 1일 이후 설립되는 신규 제조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30%→25%) ○ 향후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에 대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 ○ 창업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 전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하루 만에 사업자 등록 절차 끝낼 수 있도록 행정 간소화 |
| | ② 인도국민연금(EPS, Employee Pension Scheme) 납부 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정부는 월급여 15,000루피(약 200불) 이하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인도국민연금 고용주 부담분(월 급여의 8.33%)을 기업에 지원 ○ 인도 국민연금은 종업원 2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의무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월 급여의 8.33%를 납부 ○ 이를 위해 100억 루피(약 1800억원)를 배정하였으며,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 ③ 영세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
| ○ 연매출 5000만 루피(약 9억원)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29%로 인하(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은 30%) | |
| ④ 세율 변동을 통한 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카(기본관세 10%→60%), 알루미늄제품(기본관세 5%→7.5%) 등 관세 인상을 통한 인도내 제조 유도 ○ 산화알루미늄(기본관세 7.5%→5%), 통신장비(라우터, 셋톱박스 등)부품(물품세 12.5%→0%)등 부품·원부자재 세율 인하를 통해 제조업 지원 | |

[자료원 : 인도 예산안, KOTRA재구성]

6 인프라 개선

□ 교통 인프라 등 인프라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도로 및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2조2124억 루피(약 39조9천억원)를 배정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규모임



[자료원 : 인도 예산안, The Times of India에서 재인용]

- **(도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9700억 루피(약 17조 5천억원)를 투입하여 고속 도로(National Highway)를 10,000km 연장
 - 참고로 도로망 확충 관련, 그간 여러 이유로 총 연장길이 8,300km에 달하는 도로건설 프로젝트들이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적극적인 정부 중재에 따라 약 85%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정상화됨
- **(대중교통)** 인도정부는 대중교통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자동차법(Motor Vehicle Act)을 개정하고, 대중교통 관련 정부의 인허가권을 축소
- **(항만)** 주요 항구의 현대화를 위해 80억 루피(약 1,444억원) 책정
 - 사가르말라(Sagarmala)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항만 개발 진행 중
 - * 사가르말라(Sagarmala)프로젝트는 인도 해운부를 통해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150개의 세부프로젝트로 구성. 항구현대화, 항구간 도로연결, 항구인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됨. 인도 정부는 10년내 이 프로젝트에 4조루피(약72조원)가 투입되고 1,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공항)** 지방 영세공항 시설개선 지원
 - 중앙정부와 해당 주정부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인도내 약 160개의 공항을 대상으로 각 공항당 5~10억 루피(약 90억원~180억원)를 지원
- **(전력, 에너지)** 가스전 신규개발시 인센티브 부여하고 원자력 발전에 300억 루피(약 5,415억원) 투입
- **(PPP 활성화)** 민관합동개발(PPP) 분쟁조정 관련 법안 상정 등 제도개선

□ '전기없는 마을 없애기' 프로젝트에 1조 5450억원 투자

-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2018년 5월1일까지 모든 마을에 전기를 공급 하겠다'며 농촌지역 전기보급 사업에 올해 850억 루피(1조5350억원)를 배정
 -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인도내 59만7464개 마을 가운데 97.2%인 58만934곳에 전기가 공급됐지만, 1만6530곳에는 아직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음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1단계 20개 도시 선정

- 이번 예산안에서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320억루피(약5,776억원)를 배정
 - 인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련, 최근 1차 개발대상 20개 도시가 선정됨
 - * 인도는 2022년까지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는 계획

<20개 스마트시티 선정 도시 및 순위>

| 순위 | 도 시 | 순위 | 도 시 | 순위 | 도 시 |
|----|-------------|----|---------------|----|----------|
| 1 | Bhubaneswar | 8 | Visakhapatnam | 15 | Belagavi |
| 2 | Pune | 9 | Sholapur | 16 | Udaipur |
| 3 | Jaipur | 10 | Davangere | 17 | Guwahati |
| 4 | Surat | 11 | Indore | 18 | Chennai |
| 5 | Kochi | 12 | New Delhi | 19 | Ludhiana |
| 6 | Ahmedabad | 13 | Coimbatore | 20 | Bhopal |
| 7 | Jabalpur | 14 | Kakinada | | |

[자료원 : 인도 도시개발부]

III

우리기업 진출 기회 분석

1

이번 예산안에 대한 우리기업 반응

| 진출부문 | 이번 예산안에 대한 반응 |
|---------------------------|--|
| ① 자동차부문 진출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이 올라감으로써 인도 현지 생산기업에게는 호재임. 반면 인도내 소싱 비율이 낮은 기업은 부품 관세율 상향의 여파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인프라세 도입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 감소에 따른 리스크 증가 |
| ② 전자제품부문 진출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전자부품의 관세가 인상되어 원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크게 염려되는 수준은 아님. 작년도 예산안에서 언급된 법인세 인하가 반영되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움 |
| ③ 철강부문 진출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예산안에서 인프라 개선에 대한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반면, 자동차 부문 세금인상(인프라세 등)은 철강 수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 ④ 철도부문 진출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철도청의 경우, 철도청 산하 자회사들에 납품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이로 인한 낙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철도부문 관련 일부부품에 대한 물품세(excise duty)가 인하(12.5% →6%)되었으나 해당 품목의 경우, 인도 발주처에서 환급을 받는 부분으로 이로 인한 반사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⑤ 물류부문 진출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많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물류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선박수입상품에 대한 운송임에 서비스세 14%를 부과함으로써 운송임과 관련하여 비용 상승이 우려됨 |
| ⑥ 상사·무역 부문 진출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흉년으로 생산량이 부족하였음. 이번 예산안에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가 많아 향후 농산물 조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함 |
| ⑦ 발전·플랜트 부문 진출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으며, 수요증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현지 업체와의 경쟁이 오히려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

2 이번 예산안에 따른 산업별 기상도

| 산업 부문 | 예산안 내용 | 전문가 및 업계 평가 | 기상도 (0-5점) |
|---------|--|---|---|
| 제조업 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관세 및 물품세(excise duty) 변경 - 신규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 - 식품가공 및 마케팅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100%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정책 - 사업환경 개선과 Make in India 정책에 부합 하는 내용 |  (4점) |
| 전자 & 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회로기판 등 주변 기기에 대한 2% 특별 추가관세 부과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원가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드셋과 태블릿 PC의 가격이 5%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인쇄회로기판의 가격이 스마트폰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인상 불가피할 듯 |  (2점) |
| 정보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우터, 셋톱박스, 비디오레코더, CCTV,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기본관세(BCD), 상계관세(CVD) 및 특별부가관세(SAD) 인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원가확보에 기여할 것 |  (4점)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 루피를 초과하는 럭셔리 자동차 구매 시 구매금액의 1%를 원천징수함 - 인프라세(Infrastructure Cess) 도입하여 자동차 판매시 1~4%징수 - 골프카(golf car)에 대한 기본관세를 현행 10%에서 60%로 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인상으로 인한 수요감소 우려 |  (1점) |
| 전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5월 1일까지 농촌지역 전기공급 100% 달성 목표 - 석탄(coal), 갈탄(lignite), 토탄(peat)에 부과되는 '청정 환경 조세'를 톤당 200루피에서 400루피로 인상 - 원자력 발전에 300억 루피 (약 5,415억원) 투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수요 증가와 민간협업 활성화 기대 |  (4점) |
| 에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약 503억 루피(약 9,069억원) 배정 - 풍력 발전용 일부 원자재에 대한 물품세 인하(12.5%에서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줌 |  (4점) |
| 전자 상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전자 상거래업체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시 일부를 원천징수함 (특정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온라인 결제 육성책에 따라 전자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 - 지속적인 세목확대는 산업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3점) |

| | | | |
|-----------------------------|---|--|---|
| <p>철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향후 5년간 8조5천억 루피를 투자 - 400개 역사(驛舍)를 민관협력(PPP)을 통해 재개발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산업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물류인프라 개선과 제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p>(4점)</p> |
| <p>방위 산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4월 1일부로 인도 중앙 정부 및 주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특정 방위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혜택 소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정부는 방산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방위산업 예산 중 단 10%만이 방산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임 - 예산안에 방위산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실망스러움 |  <p>(2점)</p> |
| <p>의료 서비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한 가구당 연간 최대 10만 루피(약 180만원)까지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의료보장서비스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서비스와 관련 내용이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개됨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될 것임 |  <p>(4점)</p> |
| <p>금융서비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데이터 관리 센터 설립 - 인도 증권거래소에 의한 새로운 파생상품 출시 가능 - 국영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2,500억 루피(약 4조5125억원) 배정 - 불법 예금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법안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은행 자본확충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 - 기업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 |  <p>(3점)</p> |
| <p>보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천후 등에 의한 작물의 피해손실을 보상하는 공공보험에 550억 루피(9916억원)를 배정 - 일부 중증환자를 위한 공공 건강보험(Niramaya)에 대해 서비스세(Service tax) 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성격의 보험제도 도입으로 보험의 보급률이 높아질 것임 |  <p>(4점)</p> |
| <p>부동산 & 인프라</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지된 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정상화하기 위해 5,500억 루피(약 9916억원)를 배정 - 도로 인프라 개선에 총 9,700억 루피(1조7489억원)를 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분야 예산을 22%나 늘린 것은 긍정적인 요소 - 도로 확충에만 예산이 집중된 것은 다소 아쉬움 |  <p>(4점)</p> |
| <p>농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까지 농민 소득액 두 배 증대를 목표로 농촌개발과 농민 복지부문에 각각 8,777억루피(15조8230억원)와 3,598억루피(6조5000억원)를 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성장에 소외되었던 농촌과 농민을 위한 긍정적 예산투입 |  <p>(5점)</p> |

3 시사점

① 이번 예산안의 의미

□ (긍정적) 안정적·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의 결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그간의 모순을 해소하고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점에 중점을 둬
 -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인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개선을 지원한다는 목표하에, 농촌개발, 농가 소득증대, 서민대상 공공의료보험 확대, 농촌지역 일자리보장, 기술교육 장려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
 - 집권여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반대세력인 서민과 농민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예산안으로 평가되며 이는 올해 치러질 5개주 지방선거와 내년 예정인 3개주 지방선거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 실제로 모디 총리는 예산안 발표 전날인 2월28일 인도에서 인구가 많은 주인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주를 방문하여 농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며 빈민구제와 농민보호를 강조함

<예산안 발표 전날, 농민 앞에서 연설하는 모디총리>



[자료원 : India Today]

- 동시에 개혁과제의 추진의지를 다시 강조하고 중장기적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산업개발과 인프라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인프라 분야의 예산을 전년 대비 22.5%나 증액하고 10,0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등 도로, 항만, 에너지, 공항 전반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노동개혁, 세제개혁, 토지법 개선 등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향후 모디정부가 상원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 개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 * 모디 정부의 상원 과반 획득은 주선거 결과에 따라 2017년 경 이루어질 전망
- Make In India, Startup India, Clean India, Digital India 등 주요 아젠다에 대한 추진도 순조로운 편

□ (부정적)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속도에 대한 회의감 대두

- 모디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들어섰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
- 3대개혁(토지, 노동, 세제)이 모두 지지부진하며, 당초 올해 도입키로 했던 GST(Goods and Services Tax, 상품서비스세)도 도입이 다시 무산되자 기업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중
- 지난 회계년 발표했던 4년내 법인세 인하(30%→25%)와 관련해서도 올해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기회요인) '농촌·인프라 개발'관련 수요 증가

- 올해 예산안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농기계, 영농설비, 관개시설구축 등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
- '전기 없는 마을 없애기' 프로젝트 등 발전 및 송배전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기자재 진출기회 확대
- 경제성장과 농촌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확대와 소비증가
- 예산안 발표후 주가가 급등하는 등 예산안에 대한 낙관론 확산

□ (위협요인) 조세분쟁 증가, 일부 시장위축, 루피화 절하 우려

- 공격적인 세무조사 및 과세 우려
 - 올해 예산규모가 10.8% 증액되었으나, 인도 정부는 공공부문 급여인상 및 군인연금 보상액 등으로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
 - 인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세무조사 및 일방적 과세 등의 세무행정을 추진할 우려 확산
- 조세율 증가에 따른 산업위축 우려
 - 인프라세 부과 등 세금증가에 직격탄을 받은 자동차산업은 가격인상과 판매위축이 가시화
 - * 현대차의 경우 올해 8~9%였던 당초 판매성장률을 5~7%로 하향조정
- 지속적인 루피화 절하 우려
 - 개혁추진속도에 대한 실망감 등이 인도에 대한 투자축소로 이어질 경우 루피화 절하 추세가 이어져서 중요한 리스크로 대두될 수 있음
 - 인도 경기 침체로 인도 루피화는 2011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절하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인도 수입상들의 구매력 저하, 제조기업들의 원가 부담 증가,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 달러당 루피화 변동 : 2011년 8월(45루피) → 2016년 3월(67.1루피)
 -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말 인도 경제가 루피화 하락에 휘청이고 있다고 언급

<지난 1년간 루피화 변동추세>



[자료원 : Bloomberg]

② 시사점

□ 인도의 정책변화에 주목

- 이번 인도 예산안은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성장과 사회안정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모디 정부의 정책변화를 시사함
- 이에 따라 노동법개혁이나 토지수용법개정 등 민감한 개혁과제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개발과 성장에 있어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것으로 보임

□ 정부 협업 수요는 오히려 증가

- 인도 정부가 Make In India 등 주요 정책 수립에 있어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협업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항공협정 개정,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개선을 위한 공동위개최, 인도 상공부내 코리아플러스 설치(원스톱 투자진출 지원)등에 합의함
- 한편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인도에 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지원에 합의한 것은 인도가 그간 한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거절해 온 전례를 볼 때 양국 협력의 확대 기초를 의미

□ 인도인에게 도움 되는 한국 이미지 조성이 시급

- 이번 예산안이 서민, 농민 위주로 짜여진 배경에는 반외국정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인도 진출이 한-인도 양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미지 조성이 시급함
- 일본의 경우는 연 2,000억엔 이상의 ODA(공적개발원조)자금을 투입하여 각종 인프라 개발에 앞장서는 등 인도에서 매우 친근한 이미지 구축에 성공
- 한국정부 및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 및 협력이 인도의 인프라 개선, 인도인의 생활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 | |
|----------|--------|
| ◆ 아대양주팀 | 박민준 차장 |
| ◆ 뉴델리무역관 | 임성식 과장 |
| ◆ 뭄바이무역관 | 장진영 차장 |
| ◆ 첸나이무역관 | 장강석 대리 |



Global Market Report 16-010

2016/17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과 대응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6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7219-03-3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2016/17년 인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대응
